

## 26강 - 교원소청심사

### ■ 학습목표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강임, 휴직, 면직, 직위해제 등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2005년 교원소청심사로 명칭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숙지한다.

### ■ 학습내용

교원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 절차인 교원징계재심절차(교원소청심사)의 구체적 내용 및 불복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 ■ 용어의 정리

\* 각하 : 소청청구의 제기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요건심사 결과, 그 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 본안심사를 거절하는 결정을 말한다.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소청심사청구를 하거나 소청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해서 청구를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기각 :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본안심사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말한다.

\* 취소·변경 : 본안심사의 결과,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였다고 인정되어 그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으로서 소청심사대상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취소 또는 처분을 명하는 것이다.

\* 확인 : 처분의 무효 등 확인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대심대상인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결정을 말한다.

\* 이행명령 :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말한다.

### ■ 사례 :

#### <사건의 개요>

H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H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A는 무용학과를 졸업한 후 2급 정교사로 신규임용되어 체육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일본어 부전공 자격을 취득하였다. H고등학교에서는 무용과 일본어 과목을 담당하였다.

A는 2007. 6. 25. 교장실에서 교장에게 일본어 1급 정교사 자격취득 연수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자신을 일본어 전담교사로 전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교장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일본어 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면서 교장실을 나갔다.

A는 ① 고의로 3학년 일본어 기말고사 듣기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② 3학년 일본어 기말고사 지필평가와 2학년 무용 기말고사 수행평가에 대하여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마

감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③ 2007. 6. 26. 무단결근하였고, 같은 해 6. 29., 같은 해 7. 4. 무단조퇴하여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교원징계위원회의 2007. 9. 14.자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다.

A가 2007. 10. 23. 참가인을 상대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8. 1. 7. A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A는 법원에 교원징계소청심사결정취소를 구하였다. A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징계권행사로서 부당하며, 교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후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한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A의 주장 및 청구는 타당한가?

#### <이 사건의 쟁점>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지 여부 및 징계사유가 존재할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여부 및 교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후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하는지 여부

#### <사건의 결말>

A는 듣기평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결근하여 예정대로 듣기평가가 실시되지 못하였고, H 고등학교 측이 성적처리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듣기평가를 실시하도록 독려했음에도 일본어 전담교사로 전과시켜 달라는 개인적인 요구조건만을 내세우며 듣기평가 실시와 NEIS 마감처리 실행을 계속적으로 거부하였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학사행정업무를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A가 2006. 6. 26.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A의 위 각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써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A를 해임에 처하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교원을 해임하기 위하여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후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A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 <전문가의 의견>

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

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이 정하는 임면에는 징계로서 행해지는 파면과 해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법인은 관할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후 징계의결서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며 임명권자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4조, 제66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은 학교법인이 관할 교원징계위원회에 소속 교원에 대한 해임·파면 등의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규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교원을 해임하기 위하여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후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 <본 학습>

### 1. 교원소청심사의 의의

교원소청심사란,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강임, 휴직, 면직, 직위해제 등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송구조상으로 볼 때 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 절차이기도 하다. 2005년부터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란 명칭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변경되었다.

### 2. 재심기관의 설치·구성 및 성격

#### 가. 설치·구성

1991년 5월 31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의 공포·시행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종래의 교원징계불복절차를 크게 고진 것으로서 재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인 발전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종전에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 등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과 같이 총무처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립학교교원의 징계 등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경영자가 설치한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새 제도는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불복은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는 업무를 모두 일원화 함으로써 교원의 지위향상과 신분보장을 강화하는데 큰 진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에서는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에 대

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인원은 상임으로 한다(교원지위법 제7조 제2항).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신분에는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1조를 준용한다.

#### 나. 위원의 자격

위원(위원장 포함)은 다음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교원지위법 제8조제1항).

-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 한 자
- (2)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 (4)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다. 법적 성격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재심 기관으로서 특별행정심판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재심기관이라는 면에서는 학교법인에 대한 행정감독적인 관점에서 실정법상 특별히 마련된 간이 분쟁처리 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판례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을 행정처분의 성격과 재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것으로 보아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보고 있다(대판 1993. 3. 12. 92누13707 및 1995. 6. 13. 93누23046).

위 판례는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이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학교법인을 상대로한 민사소송 이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 내지 10조에 따라 교육부 내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지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이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3. 3. 12. 92누13707).

판례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교육

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3항 규정상 그 재심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위원회에 그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교원으로 하여금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그 제10조 제3항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실질적으로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에게 불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995. 6. 13. 93누23046).

### 3. 소청심사청구 요건

#### 가. 소청심사청구인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교원지위법 제9조제1항). 여기서 ‘교원’이라 함은 국·공·사립 구분 없이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을 말한다.

#### 나. 소청심사청구 대상

교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야 한다(교원지위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여기서 말하는 징계처분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와 사립학교법 제61조에 규정된 파면·해임·징직·감봉·견책을 말하며,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란 강압·휴직·직위해제·직권면직·전보·강요에 의한 의원면직 등과 같이 구체적인 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을 지칭한다. 따라서 근무성적평정, 당연퇴직 등은 소청심사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다. 소청심사청구 기간

교원은 소청심사청구대상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교원지위법 제9조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행정심판법 제18조제4항). 소청심사청구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심사청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청구인이 책임 없는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인지 여부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피청구인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소청심사청구절차 및 기간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소청심사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 받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 라. 소청심사청구 방식

교원이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에 그 사본 1부와 처분사유설명서(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 ② 소속학교명 또는 전 소속학교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 ③ 피청구인(처분권자를 말하되, 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제청권자를 말한다. )
- ④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⑤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 ⑥ 재심청구의 취지
- ⑦ 재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 4. 소청심사절차

#### 가. 소청심사청구 접수 및 보정명령

소청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우선 소청심사사건처리부에 등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담당사무관을 지정한다. 소청심사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 나. 접수 통지 및 변명서 제출 요구

소청심사위원회는 접수한 소청심사청구서 부분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 소청심사청구 사실을 통지함과 아울러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이유에 대한 반박 내용과 원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담은 변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때 피청구인은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변명서 접수·검토

피청구인의 변명서가 제출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변명서 부분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아울러 청구서와 변명서를 토대로 당사자적격, 소청심사청구기일, 소청심사청구대상 등 소청심사청구요건을 심사한다.

#### 라. 사실조사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감정 기타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마. 심리기일 지정·통지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

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통지를 하여야 하며, 당사자 중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통지는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가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바. 심사회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기타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하며, 그 참석범위는 위원장, 위원, 심사과장, 담당사무관, 담당직원, 당사자(대리인) 및 증인이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사건을 심사할 때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여 그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출석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결정할 수 있다.

#### 사. 결정

결정이란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심사의 결과를 판단(선언)하는 행위이다. 소청심사청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교원지위법 제10조제1항). 소청심사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아. 결정서 작성·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 ① 당사자의 표시
- ② 결정주문
- ③결정이유의 개요
- ④증거의 판단

등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자. 결정의 이행과 불복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끝내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는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교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교원지위법 제10조제3항)

## 5. 교원징계 관계법령

### 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한다. [개정 1990.4.7]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55조 (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66조 (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임명권자가 제1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 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 정리하기

교원소청심사란,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강임, 휴직, 면직, 직위해제 등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이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이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 내지 10조에 따라 교육부 내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지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이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3항 규정상 그 재심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위원회에 그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교원으로 하여금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그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그 제10조 제3항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그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에게 불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 평가하기

1. 교원소청심사청구의 결정형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각하란 소청청구의 제기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요건심사 결과, 그 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 본안심사를 거절하는 결정을 말하며,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소청심사청구를 하거나 소청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해서 청구를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기각이란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본안심사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말한다.

(3) 취소·변경이란 본안심사의 결과,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그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으로서 소청심사대상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취소 또는 처분을 명하는 것이다.

(4) 확인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말한다.

해설 : 정답 (4)

확인 : 처분의 무효 등 확인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대심대상인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행명령 :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말한다.

## 2. 교원소청심사(교원징계재심)제도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1)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이다.

(2)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이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육부 내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3)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육부 내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지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다.

(4)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3항 규정상 그 재심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위원회에 그 재심청구를 한 교원뿐만 아니라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 등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4)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3항 규정상 그 재심

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위원회에 그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문제 3. 교원소청심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중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해설 : 정답 (1)

제7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